

건설동향브리핑

제552호 (2016. 3. 14)

■ 정책 · 이슈

- 2016년 상반기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0.39% 상승
-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 경영 · 정보

- A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 경제 동향

- 조달청, 올해 29.8조원 시설공사 발주 계획 예시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노후 인프라 투자, 내수 활성화 이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6년 상반기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0.39% 상승

- 단가조정 747개 항목 평균 0.61% 상승, 총액으로는 0.12% 상승 효과 -

■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토대로 시장, 시공 상황 고려해 발표

- 100억원 이상 64개 도급내역(계약단가), 2개 종합심사제 사업 66개 입찰내역(입찰단가), 24개 사업장(12개 낙찰사, 12개 대기업) 209개 공종의 시공단가를 조사
 - 시공단가의 경우 현장에서 집행 혹은 집행 예정인 현실단가를 조사한 것임.
- 민관 동수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3차에 걸친 발주청 및 시공사 전문가 협의를 거쳐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

■ 단가 산정 원칙과 기준

- 3건 이상 또는 산출근거가 조사된 209개 단가는 전문가협회에 상정함.
 - 조사단가 평균이 2015년 하반기 대비 $\pm 5\%$ 일 경우 하반기 단가 그대로 반영
 - 조사단가 평균이 2015년 하반기 대비 $\pm 5\sim\pm 10\%$ 의 경우 5% 초과 등락률의 1/2 반영
 - 조사단가 평균이 하반기 대비 $\pm 10\%$ 초과인 경우 $\pm 2.5\%$ 조정 후 추가 $\pm 3\%$ 반영
- 단가변동요인 추가조사 필요항목은 지난 6개월 간 건설공사비지수 등락 반영
 - 토목 +0.07%, 건축 및 설비 +0.43% 반영
- 전문가협회 검토조정항목은 119개 항목이며, 연관규격은 195개 항목, 합성단가는 433개 항목으로 단가조정항목은 총 747개 항목임.
 - 물가연동 항목은 1,221개 항목으로 이 중 90개 항목은 추가조사 필요항목으로 결정

■ 단가조정 747개 항목 상승률은 평균 +0.61%

- 조정 747개 항목 중 토목 0.67%, 건축 1.44%, 설비 0.06% 상승
- 조정 747개 항목 공사비를 총액 상승으로 환산 : $\sum(\text{단가 상승률} \times \text{금액 비중}) = +0.09\%$
 - 토목 0.04%, 건축 0.06% 상승

■ 표준시장단가 총 1,968개 항목 기준 단가 상승률은 평균 +0.39%

- 1,968개 항목 중 토목 0.34%, 건축 0.59%, 설비 0.26% 상승
 - 토목 0.05%, 건축 0.08% 상승
 - 1,968개 항목 공사비가 시물레이션 대상 234개 사업 전체 공사비의 약 20% 차지
- 총 1,968개 항목의 상승률을 총액으로 환산 : $\sum(\text{단가 상승률} \times \text{금액 비중}) = +0.12\%$
 - 토목 0.05%, 건축 0.08% 상승

<표준시장단가 전체 상승률 현황(총1,968개 항목 기준)>

구분	항목 수	평균단가 상승률	단가 상승률 평균	금액 비중*	총액 상승
종합	1,968	0.77%	0.39%	20.11%	0.12%
토목	1,083	0.77%	0.34%	11.58%	0.05%
건축	510	0.76%	0.59%	7.29%	0.08%
설비	375	0.83%	0.26%	1.23%	0.00%

주 : 2014년 정한 시물레이션 대상 234개 사업에서 747개 항목이 차지하는 금액 비중

■ 노임 상승률 등 반영하여 주요 단가 현실화

- 철근가공조립 단가 3% 상향
 - 노임성 공종으로 6개월 간 평균 노임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
-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개정과 연계하여 현실화
- 토목 부문의 흙운반 공종은 2015년 하반기와 동일한 단가로 조치
 - 덤프연대 요구단가 인상 등 원가 이외의 복합적 요인이 있으나 표준품셈 단가의 범위 이내로 조사되어 동결 조치
- 설비 부문의 보온 하라, 밸브 설치 상향 등 주요 단가 현실화
 - 설비 보온 : 은박발포폴리에틸렌 등은 동결, 발포폴리에틸렌매직은 5% 초과 하락분 1/2 삭감, 유리솜 매직 등은 3% 삭감
 - 밸브 설치 : 긴목밸브는 동결, 체크밸브는 2.3% 상향, 게이트밸브 등은 3% 상향 조치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 건축설계는 품질확보 위해 '건축신고' 대상까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 -

■ 건설업 비등록업자 시공 가능 범위 넓어 부실시공 우려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정부가 시공능력을 인정한 건설업등록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설업등록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범위를 너무 넓게 허용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보면, 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661㎡(200평) 이하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며, 연면적 495㎡(150평) 이하인 비주거용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 등도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함.
 - 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현장의 실태를 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탈세 등의 목적으로 편법 운용되고 있으며¹⁾,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일지라도 언젠가는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피해가 우려됨.
 - 건설업등록업자에게 도급 시공할 경우와 비교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경우, 공사관리능력 미흡, 감리 부실, 하자보수책임자의 미확보 등으로 부실시공 및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경우 감리업무가 부실해질 우려가 큼. 이는 설계자인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는 상태에서 감리대상인 시공자가 감리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건축주이기 때문임.

■ 외국에선 오너빌더 대상 건축물 제한, 허가 또는 승인받아야 시공 가능

- 호주에서는 민간 부문이 운영하는 오너빌더(Owner Builder) 교육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경우, 건축주의 직접시공허가(Owner Builder Permit)를 받을 수 있음.

1)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직접시공으로 위장하고, 실질적으로는 건설업자에게 도급 시공을 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적법한 도급 계약을 통하여 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를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임.

- 캐나다에서는 1999년 5월부터 대부분의 신축 주택은 「주택소유자보호법」에 의거, 주택소유자보호청에서 면허를 받고,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 의해서 건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면허 취득에 대한 예외가 있다면 오토빌더의 경우인데, 이는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소유자보호청에 건축주직접시공신고서(Owner Builder Declaration and Disclosure Notice)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임대용시설 및 공중 안전시설에 대하여 시공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공사에서는 빌딩 인스펙터를 고용하여 감리업무를 강화하고 있음.

■ 건축허가 대상인 연면적 100㎡ 이상은 건설업자의 도급 시공을 장려해야

- 건축허가 행위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기 전에 건축법령의 최저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의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 「건축법」에서는 연면적 합계 100㎡ 이상의 신축이나 증·개축, 대수선 등을 하려면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음.
 - 건설업등록제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서, 건축허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유사함. 따라서 건축허가 대상인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분양·임대 목적의 건축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면 건설업등록업자에 의한 도급시공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건축설계 업무는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 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대상까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단순한 적재 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작업원이 작업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공장이나 작업장, 창고 등은 다중이용시설로서 구조물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건설업등록업자 시공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

A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¹⁾

- 투자개발형 사업 선점 위해 민간 금융기관의 개발금융 활성화 시급 -

■ AIB 공식 출범 계기로 아시아 신흥국 건설시장 대폭 확대 전망

- 지난 1월, A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본격화뿐 아니라 일본, EU 등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역내 주도권 확보 경쟁 치열
 - 일본은 ADB 등을 통해 향후 5년 간 1,100억 달러 규모를 아시아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 영국은 2015년 7월 인도네시아에 10억 파운드 규모의 인프라 금융 지원을 확정하였고, EU는 3,150억 유로 유럽전략투자펀드 조성을 발표
 - 이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 건설시장 규모는 2015년 1,346억 달러에서 2021년 1,875억 달러 규모로 확대 전망

■ AIB, 향후 3년 간 교통 · 에너지 · 수자원/도시개발 중심으로 50여 건 승인 예정

- AIB의 향후 3개년(2016~18년) 사업 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5~10건, 5억~12억 달러 규모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비중은 교통 35%, 에너지 25%, 수자원/도시개발 25%, 기타 15%를 목표(2018년 말 기준)로 함.
 - 3년 간 대출 사업의 주체는 공공 부문 70~80%(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는 사업), 민간 부문 20~30% 수준이며, 향후 민간 부문 비중을 확대할 예정임.
 - 2016년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시장에서 1억~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국제금융기구(MDBs)와 협조유자를 통해 공동 추진할 예정임.

<AIB 사업 준비 및 승인계획>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준비(Pipeline)	30건	30~40건	40~50건
승인 목표	5~10건	10~20건	15~25건
대출 규모	5억~12억 달러	15억~25억 달러	25억~35억 달러

자료 : 관계부처 합동, 'A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장관회의, 2016. 2

1) 본고는 지난 2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였음.

- 이 외에도 저소득 회원국의 사업 준비를 위한 특별 펀드(Special Fund)를 조성, 기술 지원, 자문서비스 등 지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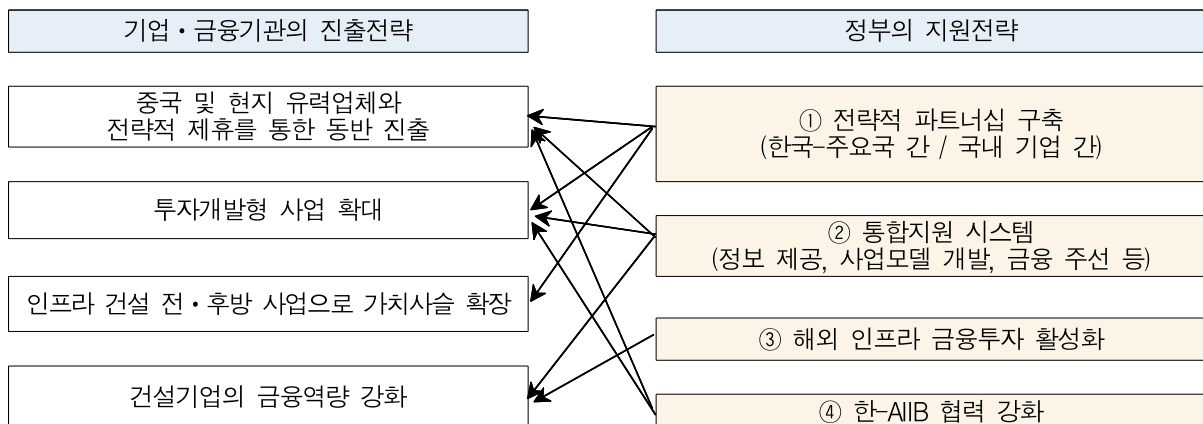
■ 한국 정부, AIIB 활용 극대화 위해 기업 · 금융기관 및 정부의 4대 전략 마련

- 우리나라 정부는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하여 AIIB 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합동 종합전략 마련
 - 전략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주요 진출전략과 이에 대한 정부의 4대 지원전략으로 구성
 - 기업 · 금융기관의 주요 진출전략은 ① 중국 및 현지 유력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동반 진출, ②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③ 인프라 건설의 전후방 사업으로 가치사슬 확장, ④ 건설기업의 금융역량 강화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4대 지원전략으로는 ① 한-주요국 간 및 국내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②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③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활성화, ④ 한-AIIB 협력 강화임.

■ 기업의 관련 역량 확보 및 민간 금융기관의 개발금융 참여 여부가 전략 성공 좌우

- 현재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해외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취약하므로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위험과 수익분석 역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발 효과성과 상업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모델 개발 필요

<한국 기업 · 금융기관과 정부의 추진전략>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조달청, 올해 29.8조원 시설공사 발주 계획 예시

- 중앙조달 74.8% 상반기에 집중, 상반기 고속도로 공사 발주 증가 예상 -

■ 전년 대비 5.6% 감소

- 조달청은 지난해 31.6조원보다 5.6% 감소한 29.8조원 규모의 올해 발주 계획을 공표¹⁾
-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공사 발주는 증가하나,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은 감소할 예정
 -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컨벤션센터, 복선전철, 야구장 건립 등으로 전년 계획 대비 5.5% 3,823억원 증가할 예정임.
 -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난해 계획 대비 17.4% 1조 674억원 감소할 전망
 - 공기업으로 구성된 기타기관의 경우도 올해 발주가 전년 대비 5.9% 1조 946억원 감소할 계획임. 특히, 철도 사업 축소가 큰 편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전년 대비 3.9조원 감소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0.7조원), 한국농어촌공사(-0.6조원) 등도 감소할 계획임.

<조달청 신규 시설공사 발주계획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건)

구분	2016년(A)	2015년(B)	전년대비	
			증감액(C), (A-B)	비율(C/B)
국가기관	50,638 (2,235)	61,312 (2,298)	-10,674	-17.4%
지자체	72,956 (17,875)	69,133 (16,628)	3,823	5.5%
기타기관	174,523 (5,011)	185,469 (2,736)	-10,946	-5.9%
합 계	298,116 (25,121)	315,914 (21,662)	-17,798	-5.6%

주 : 괄호안의 수치는 공사 건수임. 자료 : 조달청 보도자료(2016.2.17)

■ 중앙조달 규모 8.15조원

- 한편, 올해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중앙조달 신규 공사 금액은 전년 대비 14.6% 감소한 8조 1,513억원임. 이 중 74.8%에 해당하는 금액인 6조 979억원이 상반기에, 나머지 2조 534억원이 하반기에 발주될 계획임.

<조달청 중앙조달 신규 공사 분기별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조달청(중앙조달 시설공사)	23,877	37,102	10,555	9,979	81,513

자료 : 조달청 보도자료(2016.2.17)

1) 국방부, 한진, LH공사 등이 자체적으로 발주계획을 예시하는 기관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달청이 발표한 발주 규모는 전체 공 발주의 70% 정도에 해당됨.

■ 주요 공기업 50% 이상, 상반기에 발주

- 한편, 지난 2월 24일 대한건설협회의 201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5개 공공기관 신규공사의 절반 이상(51.2%)이 상반기에 발주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개 기관의 공공공사 발주 계획을 취합한 결과 19.5조원의 신규 공사가 추산되었으며, 이 중 51.2%인 10조원 정도가 상반기에 계획됨.

■ 상반기 고속도로 관련 공사 크게 증가 예상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올해 6.8조원의 발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 계획이 대략 4조원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2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지난해 대부분의 고속도로 공사가 하반기에 발주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에 관련 공사 발주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LH공사의 경우, 작년 12조원보다는 감소한 10.7조원의 공사가 발주될 계획임. 비록 작년보다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주요 공기업 중에서는 발주 금액이 가장 큼.
 - 올해 2013년 이후 최대 규모인 9.6만 가구의 임대주택(건설임대 6.0만 가구)을 신규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올해 임대주택 사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기재부가 지난 2월 24일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가운데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분야의 집행률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움. 결국, 상반기 중 특히, 1/4분기에 공공공사 발주가 계획한 것보다 좀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주요 공기업 2016년 공공공사 발주 계획>

(단위 : 조원)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국토교통부(도로, 수자원 등)	0.075	0.014	0.036	0.018	0.143
한국도로공사	3.43	0.90	0.99	1.49	6.80
한국철도시설공단(노반, 건축 등)	0.15	0.15	0.49	0.02	0.81
한국수자원공사	0.44	0.24	0.12	0.25	1.04
LH공사	1.70	2.90	3.60	2.50	10.70
합계	5.72	4.19	5.20	4.26	19.36

주 : 발주계획 설명회에서 발표된 자료는 전체 발주가 아닌 일부이며, 실제 발주는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100억원 미만 공사(대략 3,000억원 규모)가 누락된 수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1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2016.2.24) 자료 취합 및 가공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3. 7	서울시	● 주택정책과 주관, ‘재개발임대주택 시범위탁 모니터링 회의 결과 후속 협의회’ 회의에 산업정책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3. 8	경기도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에 경영금융연구실 이홍일 실장 참여
3. 1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3월 연석회의’에 경영금융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주요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이슈포커스	중소 건설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보증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로부터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수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해 국내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진출현황 및 해외시장 진출시 이용할 수 있는 금융 및 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함. ● 국내 중소 건설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담보여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떨어져 해외시장 진출시 금융 및 보증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업은행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부족 및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워 공적 수출 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 집중현상을 보임. ● 정부는 2013년부터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위한 금융 및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및 2015년 공동보증제도가 도입됨. ● 정부가 이미 도입한 지원정책의 보완관점에서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이 해외 건설시장 진출시 필요한 금융보증 지원방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수출 신용기관에 제한되어 있는 금융지원을 국내 민간 금융기관까지 자금공급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해외건설 지원 금융구조의 재정립 필요 - 특정지역 혹은 특정 공종에 전문화되어 있거나,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하는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우수중소기업(가칭)’ 인증제도 도입 필요 -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립을 통해 해외건설·플랜트시장 진출 정책의 체계화가 필요

■ 연구직원 모집

- 응시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임용 예정일 기준)
- 전공분야 :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정책학), 법학, 토목공학(사회환경공학), 건축(공)학 (해당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자는 우대)
- 채용직급 : 연구위원급
-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연구발표 및 면접
- 서류제출 기한 : 2016년 3월 31일(목) 18:00
- 문의 및 참조 : 행정실(Tel. 02-3441-0671) 및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노후 인프라 투자, 내수 활성화 이끈다

서울시가 최근 내부순환도로 정릉천변 일부 구간에서 중대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전면 통제했다. 폐쇄 구간은 하루 평균 9만 7,000대가 이동하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간당 4,500~5,500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시설물 안전’이 시정의 주요 어젠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또한 사용자인 서울시민의 의식에 뿌리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가도로를 포함한 서울시 교량의 약 60%가 안전 등급이 ‘D’와 ‘E’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사용 연수 30년 이상이다. 또한 서울시 교량 3개 중 한 개꼴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후 교량과 도로 함몰의 주요한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약 4조원이 필요하지만 안전 점검 및 내진성능 개선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의 경우에도 97개 역사 중 34개 역사가 유사시 피난시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승강장과 내부 계단 폭을 넓히고 소방시설 및 공조 시스템 개선에 약 5,500억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성능 미달의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개선에 필요한 자원 규모는 거의 천문학적 수치이지만 서울시는 복지예산 선배정(先配定) 등으로 필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를 거론하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국민)의 안전 확보가 더 이상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시민(국민)에게 ‘커밍아웃’해야 할 시점이다. 커밍아웃하고 나서, ‘내부순환도로의 일부 구간 폐쇄’의 사례와 같이 현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시민의 고통분담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하수관로 공사와 같이 축선(軸線)의 특성을 가진 공사는 ‘수십억’ 단위 분할 발주의 민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자사업 하면 ‘조 단위’ 사업으로만 인지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지역의 건설한 중견·중소기업이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건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상이변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달하는 내진성능 보강, 하수관로의 강우확률 연수 상향 등의 설계기준 강화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 부담으로 이어진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성능개선에 대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재정(예산)을 마련해줘야 한다. ‘안전펀드’ 등과 같은 정책금융이 노후 인프라 개선에도 작용되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 <건설경제, 2016. 3. 11>

이영환(연구본부장 · yhlee@cerik.re.kr)